

문 보 은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1. 들어가며

올해 2월 1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출범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력 종합적인 인재양성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교육부, 2023.2.1.)하였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력 협의체로서 인재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교육부, 2023.2.1.: 1)가 표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교육부, 2023.2.1.: 2)할 것을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관련하여 교육부는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 등을 통해 향후 정부의 대학지원 체계 및 방식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최근의 고등교육 인재 양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움직임에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31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시행 2023.1.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고등교육 분야 재정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대학 지원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동 법 제1조(목적)에서도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새 정부 들어 고등교육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자원 확보와 지원 규모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사업 유형별로 보았을 때 일반지원사업, 학자금 지원사업,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의 형태로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며 사업 목적별로 보았을 때 인력양성, 연구개발,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 등에 기여해 오고 있다.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유용한 정책 수단이자, 대학에 대한 재정 보조를 통해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및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이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문보은 외, 2021: 4). 최근 정부의 고등교육 인재 양성 및 재정지원의 특징을 압축하면 첫째,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둘째, 지역주도 인재 양성을 추구한다는 점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징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와 요청에 의한 것이기도 하며, 고등교육의 중요한 역할이자 책무이기도 하다.

본 고에서는 정부의 대학재정투자 현황 및 최근 발표된 정부의 고등교육 인재 양성 정책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추가적으로 정책적 의사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 재정 투자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 2. 정부의 대학재정투자 현황 및 인재양성 정책 방안

정부의 대학재정투자는 대부분 재정지원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유형에 따라 일반지원사업과 학자금지원사업,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재정지원사업 목적에 따라 인력양성, 연구개발,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은 인재 양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을 제외한 인력양성이나 연구개발 지원은 보다 직접적으로 고등교육 인재 양성과 관련된다.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으나 크게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의 구조를 갖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을 추진하여 그 결과 일반재정지원사업의 도입·확대와 특수목적지원사업이 조정·축소된 측면이 있었다. 새 정부에서는 일반재정지원사업 확대와 특수목적지원사업의 병행 구조를 유지하면서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으로 특히 첨단분야, 지역주도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지금까지 결과활용에 있어 대학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기관평가인증으로 대체하는 등 대학평가 체제와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운영의 자율성 및 고등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무성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고등교육 정책에 새로운 기점이 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정부의 대학재정투자 현황과 최근 발표된 고등교육 인재 양성 정책 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려고 한다.

### 1) 정부의 대학재정투자 현황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은 정부 수립 이후 설립자 부담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 기반하여 1990년대 초까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서재영 외, 2019: 33, 문보은 외, 2022: 16에서 재인용), 1993년 문민정부 이후 고등교육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고등교육재정지원정책이 시행되면서 국가의 재정지원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을 개발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규모가 확대되어 왔다(송기창 외, 2007: 1, 문보은 외, 2022: 16에서 재인용).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는 16조 2,563억 원이며, 중앙정부 지원액이 15조 5,967억 원(95.94%), 지방자치단체 지원액은 6,596억 원(4.06%)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대부분 중앙정부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사학진흥재단, 2022: 11). 중앙정부 지원액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교육부로 10조 8,988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중앙정부 지원액의 67.04%를 차지하고 있었다(한국사학진흥재단, 202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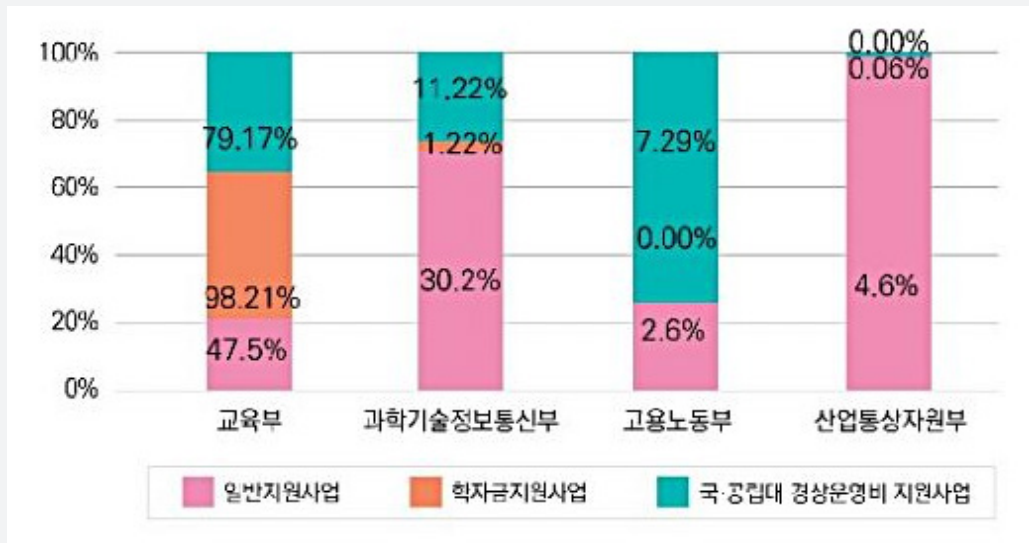
〈표 1〉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 규모(2021년)

(단위: 개, 억 원, %)

구분	중앙정부			지자체	합계
	교육부	타부처	정부 소개		
사업수	110	895	1,005	2,039	3,044
지원액	108,988	46,979	155,967	6,596	162,563
지원액 비율	67.04	28.90	95.94	4.06	100.00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2022). 2021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 분석보고서.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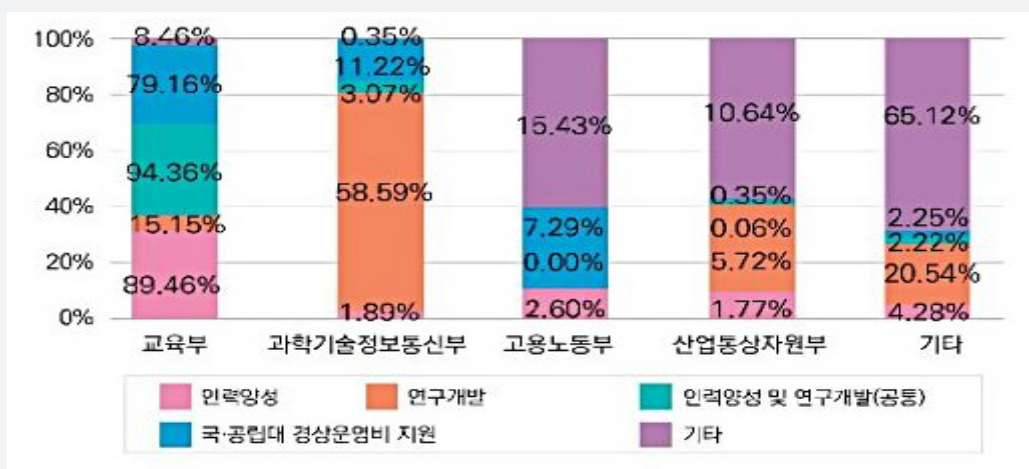
한편, 중앙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을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지원사업 6조 9,844억 원(44.78%), 학자금지원사업 4조 180억 원(25.76%),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4조 5,943억 원(29.46%)으로 일반지원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한국사학진흥재단, 2022: 16). 일반지원사업이란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등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계획·운영된 사업을 의미한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총 지원규모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지원액이 일반지원사업 3조 3,155억 원(47.47%), 학자금지원사업 3조 9,462억 원(98.21%),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3조 6,371억 원(79.17%)로 모든 사업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한국사학진흥재단, 2022: 39).



[그림 1] 부처별·사업유형별 재정지원 현황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2022). 2021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 분석보고서. p.39

중앙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을 사업목적별로 살펴보면, 인력양성 지원액이 6조 104억 원, 연구개발 지원액은 3조 4,134억 원,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공동) 지원액은 1조 4,367억 원,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액은 4조 5,943억 원, 기타 지원액 1,419억 원으로(한국사학진흥재단, 2022: 41) 인력양성 지원액 규모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부처별로 보았을 때 인력양성은 교육부가 5조 3,769억 원(89.46%)로 가장 많았으나 연구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조(58.59%), 교육부 5,172억 원(15.15%)로 나타났으며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공동)은 교육부 1조 3,557억 원(94.36%), 국·공립대 경상운영비는 교육부 3조 6,370억 원(79.16%)이었다(한국사학진흥재단, 2022: 41).



[그림 2] 부처별·사업목적별 재정지원 현황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2022). 2021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 분석보고서. p.41

이상 정부의 대학재정투자 현황을 종합하면 타부처 대비 교육부의 투자 비중이 절대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정부의 대학재정투자는 일반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부만 놓고 보면 학자금지원과 국·공립대경상운영비지원사업비가 일반지원사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대학재정투자는 인력양성 지원액 비중이 가장 높고 그 절반 정도 비중으로 연구개발 지원이 뒤따르고 있었으나, 교육부 단독으로 보았을 때 90%에 가까운 지원이 인력양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연구개발 지원은 인력양성 지원액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정부의 고등교육 인재양성 정책 방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그 대상 또는 수혜자가 대학(기관) 혹은 개별 학생(개인) 등 다양할 수 있는데 대부분 궁극적으로 인재양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근래 4차 산업혁명 시대 고급 인재양성에 대한 사회적·시대적 수요와 요구 증대로 고등교육의 인재양성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2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23.2.1.)하는 등 정부 차원의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그에 앞서 교육부는 올해 1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5개의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핵심 추진과제와 주요 정책으로 ‘지역맞춤’, ‘산업·사회맞춤’ 2개 분야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구축’과 ‘지역 중심 재정지원 확대’, ‘핵심 첨단분야 인재 육성 및 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 ‘대학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이(교육부, 2023: 3) 포함되었다(〈표 2〉 참조).

〈표 2〉 2023 교육부 고등교육 분야 핵심 추진과제 및 주요 정책

핵심 추진과제	주요 정책
지역맞춤 -규제 없는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	규제혁신 및 권한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 이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개정 추진</li> </ul>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 및 규제 완화 등을 수반하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 추진</li> <li>지자체와 중앙부처 협력 기반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및 글로벌(Glocal) 대학 육성 지원</li> </ul>
	지역 중심 재정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한 지역대학 지원 확대 및 지역 인재양성 지원규모 확대</li> </ul>
산업·사회맞춤 -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신속히 대응하는 교육	핵심 첨단분야 인재육성 및 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부처 인재양성 추진체계 확립</li> <li>기초 학문분야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인문사회 분야 등 균형 투자 확대</li> </ul>
	대학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첨단분야 인재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 신설을 통해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대학에 집중 재정 지원</li> <li>공유·협력을 통해 전공 무관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 확대</li> <li>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첨단산업 인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확대</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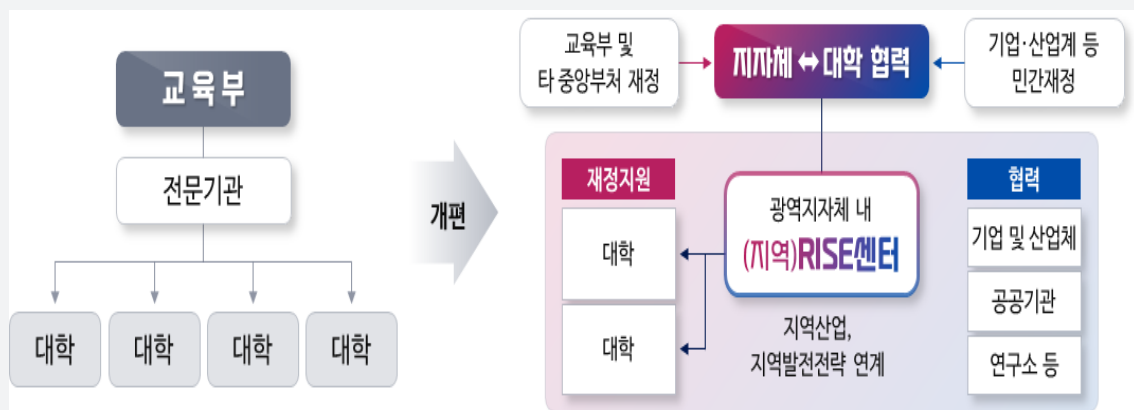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2023).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 p.3, pp.8-12의 일부 내용을 표로 재구성

정부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관계부처 합동, 2023)을 살펴보면 중앙 차원에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이 부재하고 지방 차원에서 인재중심 지역발전 청사진이 결여되어 있으며, 대학 차원에서의 경직적·제한적 교육시스템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역주도 인재양성 기반 조성’ 등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3: 3-6). 이에 따라 향후 정부는 RISE 체계를 마련한 이후 ‘25년부터 5개 사업(RIS, LINC 3.0, LiFE, HIVE, 지방대학성화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규모를 조정함으로써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관계부처 합동, 2023: 11). 또한, 기존에 교육부 중심의 하향식 대학재정지원 거버넌스 체계가 다음 그림과 같이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로 개편될 예정이다.



[그림 3]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3).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p.11



[그림 4]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안)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3).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p.12



정부의 고등교육 인재양성 정책 방안을 종합해 볼 때 새롭고 특징적인 것은, 지역중심 인재양성 기반을 조성하고 기존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일부를 RISE 예산으로 통합하는 등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과, 점차 타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단계적 편입 및 RISE로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 때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대학혁신지원사업이나 BK21 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은 병행하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는 전체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될 것인지,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의 경우 지자체와 민간의 재원이 어느 정도 규모와 어떤 방식으로 투자될 수 있는지 등 모호한 측면이 있다.

### 3.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 방향<sup>1)</sup>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등 고등교육 재정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대학 지원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 방향의 핵심은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지역중심 인재양성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첨단분야 고급 인재양성 및 지역중심 인재양성 체계 구축은 모두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관련하여 시행 예정인 재정지원사업이나 거버넌스 체계 정립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고에서는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와 관련하여 고려되거나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의 대학재정투자가 더욱 안정적인 체계를 갖추고 투자 규모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 필요성 및 정당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그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 등 교육계 내부의 갈등 요소가 남아 있고 한시성 및 재원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재원의 안정성과 충분성이 보장된 체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확충된 재원은 상당 부분 기존 사업 증액 및 사업 신설에 투자될 예정으로 사업비 위주 국고지원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편, 투자 규모 관련하여 정부는 지금까지 매년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OECD 교육지표 2022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분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감소하였으며,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 또한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2.10.3., 1, 3, 문보은 외, 2022: 20에서 재인용). 무엇보다 2014년까지는 양(상대적인 대학생 수)과 질(상대적인 1인당 교육비) 간 상충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2015년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학생 수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 또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게 되었다(김학수 외, 2021: 52, 문보은 외, 2022: 19에서 재인용).

다만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대학재정투자는 초·중등교육에 대해 국가책임의 논리가 폭넓게 수용되는 것과는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이진권, 2021: 3, 문보은 외, 2022: 4에서 재인용). 이러한 점이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 투자의 근거를 확립하고 지원을 확대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투자는 절차적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과거 고등교육의 공공성 개념을 공공재성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최근에는 보다 폭넓게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고(임은희, 2016: 12, 문보은 외, 2022: 37에서 재인용), 대학교육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교육기회의 공평성이나 국민의 교육권 관련해서도 대학교육을 개인에게 전담하게 하는 시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문보은 외, 2022: 37). 이외에도 정부의 대학 재정 투자의 필요성 및 정당성 근거는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 ‘정부지원이 불가피한 구조라는 대학재정 실태 기반 현실론’, 둘째,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혁신이 긴요하다는

1) 이하 내용은 저자가 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한 연구에서 직접 집필한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론', 셋째, '대학교육의 역할 및 기여도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외부효과론', 넷째, '대학교육의 보편화 및 교육기회의 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보편적 성격론', 다섯째, '법적 의무 및 국가적 책임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법적 지위와 역할에 근거한 당위론' 등이 그것이다(문보은 외, 2022: 80). 정부 재정 투자의 안정성과 투자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교육을 개별 대학 또는 사인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 관리와 사회적 유익 등의 측면에 기반하여,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인식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대학의 **설립유형 등에 따른 재정지원 전략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정된 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대학 간 역할 분담 및 특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문보은 외, 2021: 229). 대학 간 역할 분담이나 특성화는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설립유형에 따라 대학의 여건이나 요구가 상이할 수 있고, 필요로 하는 재정지원 내용 및 방식, 사업비 효용성 등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보은 외, 2021: 229). 따라서 정부는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른 여건 및 재정지원사업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그 차이와 효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설립유형에 따른 집중 육성·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투-트랙 재정 투자 설계를 통해 사업 중복성 예방 등을 도모해야 한다(문보은 외, 2021: 229). 그 동안 정부가 전체 대학에 대해 다수의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대학별 특성이나 수요에 따라 각기 차별화된 맞춤형 재정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의 **연구개발 분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재정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학 재정 투자는 연구보다는 교육경쟁력 제고에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는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연구 관련 사업은 BK21 사업과 학술지원사업 등에 한정된 수준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학의 연구역량 및 연구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최상덕 외, 2022: 272-273). 대학은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확산할 수 있는 인력풀과 역량을 갖고 있으므로(최상덕 외, 2022: 272) 인재양성을 위한 재정 투자는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충분히 병행되어야 한다.

대학의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는 글로벌 인재양성 및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대학의 연구개발비 비율(OECD MSTI)'과 같은 국제 지표에 있어 우리나라는 OECD 평균과 큰 격차가 지속되고 있어 더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최상덕 외, 2022: 278). 중앙부처의 R&D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약 32%)나 산업통상자원부(약 17%) 등에 비해 교육부(약 9%)의 투자 비중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1: i) 대학 정책을 주관하는 교육부의 투자가 크게 확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학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와 함께 연구분야에 대한 평가 혹은 질 관리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연구혁신기구(UKRI)와 연구 우수성 체계(Research Excellence Framework: REF)를 통해 대학의 연구 영역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있으며 연구의 영향력과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해나가고 있어(문보은 외, 2019: 47, 52), 다양한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교수의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근래 대학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실제로 많은 대학에서 교수의 교내연구비 지원이 대폭 삭감되어 외부 연구비 수주 경쟁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 대학의 인재양성은 교수·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산학협력 등 다양한 활동에 기반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대학 차원에서 대학원에 대한 투자를 줄여 나가고 있다는 점으로(문보은 외, 2020: 346),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및 대학원의 연구 지원 또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의 재정 투자 방식에 있어 재정지원사업 이외의 정책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원사업은 정부가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효과적인 제도이다(조옥경 외, 2021: 105). 다만 지금까지 정부의 대학 재정 투자가 대부분 재정지원사업 형태로 추진됨에 따라 그 취지와 상관없이 대학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무리한 사업 추진 및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논란까지 있어 왔다. 일부 사업의 경우 정부 주도의 사업 설계 및 고정 포맷 적용 등으로 인한 획일화와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대학 현장의 수요와 요구가 반영된 정책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조옥경 외, 2021: 108). 근래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재정지원사업들은 국가 전략 산업 분야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국가 차원의 재정 투자에 있어서 첨단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뿐만 아니라 대학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거나 위기 대학에 대한 지원 또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조옥경 외, 2021: 108). 특히 대부분의 재정지원사업이 보상적 투자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와 함께 조성적 차원의 재정 투자도 필요하다. 보상적 투자는 대학의 고급인재양성을 촉진하고, 조성적 투자는 안정적 인재양성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대학 재정 투자는 장기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 및 대학의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적극적 투자의 관점보다는 대학에 대한 재정 보전의 성격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문보은 외, 2022: 6). 이러한 방식이 고착화되면서 대학 재정 투자로서의 의미가 약화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재정지원사업 이외에 별도의 경상비 지원 제도 등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22). 교육부 업무보고, 2022.7.29.

| 교육부(2023).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 2023.1.5.

| 교육부(2023.2.1.).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 국가 인재양성의 초석 마련-. 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1).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 분석 보고서.

| 관계부처 합동(2023).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2023.2.

| 문보은 · 유예림 · 강호원(2019).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주요국의 정책 동향 - 영국의 고등교육 현황 및 질 관리 체계.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 문보은 · 최상덕 · 김지하 · 서영인 · 송기창 · 윤지영 · 권도희 · 김지연(2020). 사립대학 재정 운용 실태 분석: 재정 여건 및 지출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문보은 · 서영인 · 최상덕 · 윤지영 · 이진권(2021).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성과 및 과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문보은 · 이선호 · 윤지영 · 이진권(2022).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필요성 및 쟁점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 조옥경 · 김미란 · 김은영 · 서재영 · 문보은 · 최정윤 · 조한상(2021). 대학 간 공유 · 협력 체제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 최동선 · 허재준 · 박승재 · 박성철 · 박근영 · 서영인 · 문보은 · 도재우 · 장상현 · 이용상 · 박준식 · 신철균 · 백선희 · 박기범 · 정창권(2022). 해방 100년,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체제의 대전환 방안(Ⅱ).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한국사학진흥재단(2022). 2021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 분석보고서.

|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시행 2023. 1. 1.] [법률 제19202호, 2022. 12. 31., 제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7475&efYd=20230101#0000>)